

#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6**



2021. 07  
잇다



## 다이내믹, 의정

국민의 지혜를 디딤돌 삼아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 국회보

2021 July vol.656

###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7월 1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헌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표지 이야기

지혜는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가 되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 개최  
6월 임시국회 개최  
국회,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총 86건 안건 의결

---

**특집 \_ 제21대국회 1년, 성과와 과제**

---

- 16** 취임1주년 화상기자간담회 개최 \_ 박병석 국회의장  
‘헌법 불합치 결정’ 조항 신속 정비 필요 \_ 임지봉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위한 활발한 입법 기대 \_ 윤자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 주력 \_ 장지연  
입법의 과잉을 경계하며 \_ 임종훈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위해 활발한 입법권 행사 \_ 조정찬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법제실의 역할과 과제 \_ 이상현
- 36**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답은 늘 현장에 있어... 국민 주거안정에 최선 다할 것”  
\_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상생과 협력으로 국민 가려운 곳 굽어주는 위원회 될 것”  
\_ 이현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40** 길에서 길을 찾다 \_ 윤두현 의원  
역사·문화의 향기 가득한 살기좋은 도시, 경산
- 44** 칭찬합시다 \_ 박홍근 의원  
‘정치’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 46** 의원의 좌우명 \_ 엄태영 의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결 못할 문제 없어”
- 48**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이응우 의원  
미래세대 위해 경제질서 제대로 세우고파
- 5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56** 법률 시대를 읽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_ 송대호

---

**58 국회 주재관 리포트**

독일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권력분립과 합의정치 구현  
\_ 주성훈

**61 위원회는 지금**

국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현안보고 등 실시

**66 법 시행 그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8 만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70 국회 뉴스**

**78 국회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에서 사서(司書)로 근무하기

**80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고구려의 동맹이었던 중앙유라시아 초원의 강국,  
유연(柔然)제국 \_ 이광태

**84 수목원 탐방**

국립세종수목원

**88 바이러스의 역사**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친 ‘황열병’ \_ 도현신

**90 국회 미술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품어주는 손장섭의 역사적 풍경  
\_ 김준기

**93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꼬리풀’

**94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불교문화유산의 정수, 환상의 콤비...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_ 이광표

**98 대한민국 문학기행**

시인의 마을 \_ 장태동

**102 생활 속 우리말글**

공문서에서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세요 \_ 김형주

**103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이 개헌 마지막 시기…국회가 앞장서 길 열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 4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6월 4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 통해 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

원 1년간 처리 법안 2천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6월 4일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모습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선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 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강민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을 하고 있다.

한편 개원기념식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 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이,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5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부문은 제21대국회 개원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에 대해,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체계적 완성도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58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활동과 입법활동,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

①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

(가나다순, 총 30명)

구분	의원명	소속정당	대표발의법안
정치행정 (9명)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국민의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산업 (10명)	김정재	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성일종	국민의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한국광업공단법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문화 (11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국민의힘	기초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국민의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정책연구 부문 수상자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정치행정 (1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장제원(국민의힘)
경제산업 (2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	심상정(정의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사회문화 (2개)	여성·아동 인권 포럼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약자의 눈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본회의도 이제 원격으로 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 개최



6월 25일 제2회의장(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부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등이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는 6월 25일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시연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속히 퍼져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꼈다”며 “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비상응급상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합의 하에 원격영상회의의 표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원격영상회의의 도입의 의미를 밝혔다.



원격 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사진 왼쪽부터)

시연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은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구성과 국회의원의 원격영상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등 원격영상회의 관련 주요사항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고 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원격으로 직접 발언과 표결에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시연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은 다중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쉽없이 돌아가려면 장

치가 필요하다”면서 “원격영상회의가 이를 실현해내는 장치만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고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를 함께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73조의2는 국회의장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

## 6월 임시국회 개회



6월 16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6월 임시국회(제388회 국회임시회)가 6월 4일부터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6월 16일, 1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6월 22일~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6월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이어 6월 29일과 7월 1일 각각 본회의가 열렸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층 위해 특임장관 신설, ‘누구나집’ 주거정책 추진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6일 취임 후 첫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면서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월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 송 대표는 “청년특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나 집’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 청년이 희망을 품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은 ‘누구나집’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고, 국가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민주당부터 앞장서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융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7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꼭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유연한 융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해 서민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6월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특공) 악용 사건을 거론하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과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6월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실시

6월 22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대북정책, 개헌, 군 사법제도·병역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과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다”고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처럼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전환하고, 오는 2032년부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내 성범죄가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청년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22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을 펴면서 해외에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하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체적인 추세는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청년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자산가치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된다”며 “최저주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국가책임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을 소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업소별로 하나하나 (그동안의 피해 내역과 정부 지원 내역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답변했다.

6월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백신수급, 교육 공백,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이천 쿠광 물류센터 화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냐고 질의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천500억 원 정도 추가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하자 김 총리는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 국회,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총 86건 안건 의결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5건을 비롯한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과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판매시설·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등을 의결했다.

또 법안 최초 발의 후 2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일궈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과거사 치유법,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등 국민안전 강화법안, 코로나19로 경색된 소비심리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

[특집]

## 제21대국회 1년, 성과와 과제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국회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지난 1년의 국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주>



### “개헌 통한 권력 분산이 타협과 협치의 토대”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

### ‘일하는 국회법’ 등 성과… ‘헌법 불합치 결정’ 조항 신속한 정비 필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위한 활발한 입법 기대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 주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입법의 과잉을 경계하며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위해 활발한 입법권 행사

조정찬 전 한국법령정보원 원장

###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법제실의 역할과 과제

이상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 “개헌 통한 권력 분산이 타협과 협치의 토대”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 개최



6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

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달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이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식인 국회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다. 국가가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며 박 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합의했던 가칭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의 일문일답이다.

**Q. 의장님께서서는 제21대국회를 시작하면서 시대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 국민 통합을 위해 하셨던 일과 그 결실들을 말씀해주시고 그 일들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도 말씀해주시고.**

**A.**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이 있어야 공감대가 있고 공감대 속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유지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0대국회 말 패스트트랙이라는 여야 갈등의 최고조의 연장선상에서 제21대국회가 출발했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틈을 메우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차례의 원내대표 회담, 당대표 회담, 중진회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통의 채널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법정시일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4차례의 추경 중 3차례가 여야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소통을 통한 공감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5년 단임의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의장직속기구로 출범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과 국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회 소통관의 수어통역 도입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원 구성 협상이 초기에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고 기업과 직장이 무너지는 경제 위기,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 위기 등 세 가지 국가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 구성을 하지 않으면 추경을 할 수 없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직장과 가정이 무너진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Q.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를 두고 여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부의장**

**공석도 길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중재하실지 궁금합니다.**

A. 문은 닫혀 있지만 빗장은 걸려 있지 않다는 게 제일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얼마나 열지는 여야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려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안에서도 쪼고 밖에서도 쪼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침 여야의 지도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제 약기에 새 줄을 간 만큼 새로운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야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객이 변했습니다. 국민은 여야 모두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180석을 이유로 야당에게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야당은 국민이 이제 야당을 약자라고 생각할까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4·7 서울·부산시장 선거결과는 야당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벼랑 끝 협상이 야당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의 개혁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법사위처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법사위가 단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지만 특히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의 문지기처럼 게이트키퍼의 자세를 가지는 이 자체를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 및 자구수정을 이유로 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의 대전제는 법사위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제20대국회 4년간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온 법안 중에 무려 91건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부의장 문제는, 헌법 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는 헌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부의장 문제와 상임위원장 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권익위원회 전수 조사도 이뤄지고 야당 쪽에서도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산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근절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인데 현재 윤리특위 소속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상향되고 상임위 배정, 그리고 배정 후 각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해충돌 문제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보완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히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외부기관의 중립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의장님께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개헌 추진에 대해 정치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끌어모으실지 궁금합니다.**

**A.** 지난해 제가 취임하고 한 달 후인 제헌절 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바뀐 만큼 여야 지도부 그리고 각 정당과 이 문제를 깊이 상의할 것입니다. 우선 정치개혁특위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했고 특히 야당에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문제와 관련해 개헌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문제는 과거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선이 임박했는데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개헌문제를 거론하면 블랙홀

이 돼서 국정동력이 떨어져 안 된다고 하고, 임기말에는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개헌이 가능하냐고 얘기합니다.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두 차례 전국적 선거가 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순회를 하고 심지어 국회분수대 자유발언대에서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정리해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및 총선출마 연령을 하한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기본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는 않지만 40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과 체코, 터키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 바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인정한 것이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의 정치적 판단의 수준에 따라서 피선거권도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는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30대 원외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을 전후로 해서 정치권에 ‘이준석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원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한국 정당사에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한국 정치문화를 포함한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야 지도부가 모두 바뀐 지금 실질적 정치복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이준석 바람’이 현상과 추세로 이어지려면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키우는 정책경쟁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의 시간, 실질적 정치복원의 시간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

**Q. 여야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기로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 국회운영위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고 언제 선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 그동안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강조하셨는데, 혹 6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하고 계신 역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전에 건립될 국회통합디지털센터와 관련해 통합디지털센터의 건립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우리 국회는 여야합의로 올해 예산에 세종국회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책정하면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147억 원의 적지 않은 설계비를 넣었다는 것은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여야가 깊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세종의사당 조기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마지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6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1.7%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문제, 교통, 주거문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종국회의

사당 설계비를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야 지도부에게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실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디지털센터는 우리 국회의 각종 데이터의 보안이라는 시급성도 있고, 특히 디지털도서관과 의정연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굳이 서울국회의사당까지 오시지 않아도 국회 자료를 이용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일정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5월에 여야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A.** 지금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뽑기 위해 보통 10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권유를 하는데 본인이 사양합니다. 특히 어느 장관 후보자의 경우 권유한 사람이 40명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는 거기에 어울리는 도덕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은 철저하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청이나 검찰, 경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문회 수준으로 살펴보면 검증이 끝날 때까지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되 개인의 사

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이러한 검증 방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자료들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상당한 부분의 비공개가 필요하고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서 장관 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의장님께서 지난해 스웨덴과 독일, 최근에 러시아까지 의회외교를 다녀오셨는데 의회외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화상으로 만나셨는데 혹시 방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접 대면외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외교가 비대면외교보다 훨씬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순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외교와 국회의 외교는 옷감의 씨줄과 날줄 같아서 서로 교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외교를 하는 기준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경험의 증진입니다. 제가 방문한 나라가 대부분 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나라입니다. 러시아, 체코, 독일, 스웨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덴, 베트남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경제협력의 관계입니다. 베트남이나 체코의 경우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을 한 시간 이상 면담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비롯한 경험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와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화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고 특히 제가 대북문제, 핵문제는 남북한 8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펠로시 의장도 공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상회담에서 상호방문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측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가든지 펠로시 의장이 오든지 할 예정입니다. 방미가 결정된다면 여

야의 초당적 고위급 의원들과 함께 대표단을 꾸려서 방문할 생각입니다.

**Q.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사정기관이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수장의 대선 직행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저는 격차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이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장으로서 감사원장의 출마여부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 참여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

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윤리특위가 지난해 9월 위원장 선출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특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A.** 윤리특위가 구성만 되고 열리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생긴 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자는 것이 취지일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의 정쟁적 요소, 특히 선거를 둘러싼 정쟁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분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10년간의 국회윤리 처리현황을 보면 미국이 3건, 영국이 6건, 일본이 2건입니다. 우리 국회는 개원 1년도 안 돼 10여 건이 회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윤리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회가 남북국회회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중요한,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해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거의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인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인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적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화와 대결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기회가 남북평화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막 임기를 시작한 4년 임기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남북평화를 희망하는 국회의원이 다수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비준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될 것에 대비해 남북회담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글 김현아

## ‘일하는 국회법’ 등 성과… ‘헌법 불합치 결정’ 조항 신속 정비 필요

제21대국회가 야심차게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간 제21대국회는 작년 연말에 ‘상시국회’를 실현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든지,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들도 있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을 드러낸 것들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촉구 결정을 통해 법 개정의 시한까지 제시했음에도 이 시한이 도과된 ‘정치 분야 헌법불합치결정’ 조항들을 아직까지 신속히 정비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고, 일몰 후 일출 전의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에 대한 개정 시한은 2010년 6월 3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 조항들이 법 개정 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점은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앞으로 혹여라도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거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민투표법 조항의 정비가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 ‘입법개선 의무’ 수행해 법적 공백 막아야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음은 지적하면서도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주문에 적으면서 그 법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은 상실시키지 않는 결정형식이며, 입법촉구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이 내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시한을 정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이다. 여기서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헌결정의 경우 위헌적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제거되는 것에 반해,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적 법률을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위헌적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해 스스로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기보다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입법자가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은 대부분

의 경우 입법자에 대한 입법촉구결정을 포함하며, 입법자 역시 위헌적인 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가 입법촉구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법 조항은 개정 시한 다음 날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것과 똑같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헌재가 입법개선 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회는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제21대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에 대해 법 개정시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개선 의무’라는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 스스로가 ‘법적 공백’이라는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제21대국회는 이러한 중요한 ‘정치 분야 헌법불합치결정’ 조항들에 대한 법 개정 작업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입법개선 의무’라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상태에서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위한 활발한 입법 기대

제21대국회의 지난 1년 간의 경제 분야 성과는 주거와 안전 등 민생 문제 해결, 코로나 19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 공정 경제 질서 확립, 유통산업 보호와 활성화에서 두드러졌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민심을 반영하듯,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간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33건이었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법 관련 개정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6개로 뒤를 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형태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커진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이었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한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증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제20대국회 때 폐기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



윤자영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사사고,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건설현장 재해, 최근 쿠광 화재 사건처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 신속한 경제회복 위한 추경 예산 통과

코로나19 대응과 신속한 경제 회복, 피해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네 차례 통과시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게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융자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아래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규제 강화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공정경제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안에 들어 있었던 전속고발권 폐지가 무효화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술 혁신으로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유통 분야에서는 전통과 혁신의 상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성과가 눈에 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이 필요해 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제 도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으로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제21대국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공정경제’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부동산 관련 개정 법안들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애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기반 강화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 주력

제21대국회 첫 일 년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도전을 헤쳐나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 지거나 개정된 법들이 팬데믹 극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이외에도 입법적 성과를 낸 부문들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역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부동산자산의 가격과 주거안정을 위한 법,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법 등이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입법적 성과를 낸 부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국회는 감염병 통제를 위해 마련된 조치들에 법률적 권위를 부여해 제도화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활동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필수적인 물품의 가격을 통제해 긴급 수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속한 입법적 뒷받침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이나 역학적 위기에 그치지 않았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로 귀결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



장지연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도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확대 범위에 맞추어져 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신속한 파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소득파악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계기로 복지국가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을 제외하면, 지난 1년간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진 분야는 부동산자산 가격의 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법들이다. 각종 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나 보유에 대한 과세를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조치들이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이 법들 때문에 부동산자산 가격이 오르고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는 이러한 입법적 조치들을 일부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부정적 결과를 교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패한 정책이 될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또 다른 이슈는 아동학대와 성범죄처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조차 지키지 못한 사건들이었다.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겠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있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조직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입법과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감수성이 오히려 더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약자들이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 21대국회의 나머지 기간 중에 이 문제 해결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 입법의 과잉을 경계하며

제21대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입법 성과가 정말 대단하다.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1만 557건의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됐으며, 이들 중 821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리고 가결된 법률안 중 대부분(742건)이 의원발의 법률안이거나 위원회 대안이었다.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명실상부하게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가가 '통법부'라는 비판은 용납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의 입법 성과를 30년 전인 제13대국회(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938건의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어, 492건이 가결. 따라서 연평균 235건이 발의되어, 123건이 가결)와 비교해보면,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40배 이상 증가했고, 가결된 법률안 건수는 6.7배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 입법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법수요가 증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법 폭증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행 법률이 1천534건(2021.6.1. 기준)이고,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대부분이 개정법률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동안 현행 법률의 절반 정도를 개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법률이 너무 자주 개정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1년 동안 영국의회는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고, 일본 국회는 79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미국연방의회는 제116회 의회기(2019.1~2021.1) 2년 동안 344건(연평균 172건)의 법



임종훈 초빙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률안을 의결했다. 우리 국회는 같은 기간 동안 영국 의회보다 무려 20배 이상, 일본 국회보다 10배 정도, 미국연방의회보다도 4배 이상의 입법을 생산해낸 것이다.

### 입법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

1970년대에 서구의 학자들이 걱정하던 ‘법의 홍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는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 지표인 입법실적을 쌓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떠나 없이 법률안 발의 건수 경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 발의는 자연스레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에 많은 수의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것이다.

‘법의 홍수’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특별법과 특례법의 남발에 있다. 주요 사건이나 현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특례법이 서둘러 제정되곤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민식이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그 예는 너무 많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같다고 가정하면,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 건수가 많아질수록 법률안 한 건당 심의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심사할 법률안의 양적 확대는 부실 심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고, 새로운 입법이 양산되며, 일반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법과 특별법

이 남발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범자인 국민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모두 새로운 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렇게 해도 법을 제대로 준수하거나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이는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특별법과 특례법의 남발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입법의 양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많은 법’보다는 ‘좋은 법’을 적시에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여와 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법률안 발의 건수나 통과 건수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발의 또는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질적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질적 평가가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법을 할 때는, 입법이 꼭 필요한지부터 검토한 후(개정하고자 하는 현행법이나 관련법의 해석·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입법이 필요 없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와 전원위원회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며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 없이 ‘좋은 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

##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위해 활발한 입법권 행사

제21대국회는 1년간 전대 국회에 못지않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총 1만 515건이 접수되어 2천219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그중 정부발의 법안처리 상황을 보면 338건이 접수되어 163건이 처리됐는데, 이 경우에도 원안의결은 33건에 불과하고 위원회 대안 84건 등 국회가 활발한 입법권 행사를 했다.

정부발의 법안과 의원발의 법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나 철회된 안건도 적지 않고 위원회 등에 계류된 미처리 법안도 8천175건으로, 전체 발의된 법안 중 20%를 약간 넘는 법안만이 처리됨으로써 입법시스템에서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21대국회에서는 유사 이래 보기 힘든 강력한 여당이 출현했다. 다수당인 여당은 출범 중반을 맞이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미진했던 분야의 입법에 집중하려는 의욕을 보였고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의 요체인 복수정당제 보장과 소수파 존중,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쟁점 법안에 관해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거친 점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부 법안은



조정찬 전 원장  
한국법령정보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특기할 사항은 이번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당의 출현으로 법제사법위원장도 여당이 차지함에 따라 절차문제로 인한 입법 지연 소지가 제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 ‘청부 입법’ 줄고 알기 쉬운 법률 늘어

제21대국회 첫해의 입법실적을 살펴보면 ‘청부 입법’이 거의 없었지만, 단발성 입법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의원발의 법안은 물론 정부발의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그동안 국회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번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영역에서 성과를 거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지난 1년간의 입법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 가장 주목을 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차 개정한 것을 비롯해 ‘출입국관리법’, ‘남녀고용평등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항만법’ 등 각종 법률이 다양한 사태에 대응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철도안전법’ 등 다수의 안전 관련 법

률들을 정비했다.

또 하나 개원 첫해에 국회가 직면한 문제는 주거대란과 부동산 투기 대책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세법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주택공급 및 거래 측면의 각종 법률을 보완했는데, 대항세력들의 대응도 만만하지 않아 입법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여망에는 검찰개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등 입법사항도 있지만 기존 제도의 운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등의 보완을 비롯해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입법도 병행됐다.

그동안 국회는 정쟁으로 인한 입법활동 중단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국회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진일보를 보였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산적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할 것이다. 🍯

##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법제실의 역할과 과제

지난해 5월 30일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만 1년이 지났다. 제21대국회는 지난 1년간 총 1만 218건의 법률을 발의·제출했고, 이 중 의원발의 법률안은 9천882건으로 제15대국회를 기점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1)</sup>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검토를 담당하는 부서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급증에 따라 법제실에 대한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sup>2)</sup> 특히, 제21대국회 개원 후 1년간 법제실은 총 1만 6천255건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받았다. 이는 제20대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의뢰받은 법률안(1만 3천382건)의 1.2배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제21대국회 4년간 법제실은 5만여 건의 법률안을 입안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제실은 입안의뢰된 법률안이 이미 발의된 경우, 또는 입안의뢰된 법률안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거나 위헌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안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입안의뢰 취지나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인 경우, 기존 법률과 충돌·모순·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율함으로써 법제실에서 성안한 내용에 기초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법체계적·내용적 측면에서 내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실은 법제업무의 핵심가치인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첫째, ‘적시



이상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성'과 관련, 본질적으로 사회 변화에 뒤이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법률의 태생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사회적 현안에 적기·적시대응할 수 있도록 입안의뢰에 신속하게 회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법률안 입안의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입안·검토 업무의 처리 규정'에 따른 입안처리기간 준수율은 2019년 82%, 2020년 83%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법률로 규율하기 어렵고 유사입법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법제실은 법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안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pool)인 '국회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확도를 제고하고 법률안 입안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법제이론과 실제'를 발간하는 등 법제기술적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법제실은 법률안 입안·검토 업무 외에도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의뢰에 따라 행정입법을 검토<sup>3)</sup>하는 한편, 매년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해 해당 분야의 행정입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법률 규범력의 세부 내용과 범위는 행정입법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에 대

한 검토·분석은 현장에서 법률이 입법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다. 다만,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행정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시급한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로 인해 행정입법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제실 또한, 급증하는 법률안 입안의뢰 등에 밀려 행정입법 분석 업무에 투입할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행정입법 분석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원입법이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비효율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법안발의에 대한 양적 경쟁이나 불필요한 규제양산, 개정실익이 낮은 법률 제·개정 등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소수·약자·사각지대의 입법수요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앞으로도 법제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안 성안을 통해 내실 있는 의원입법을 지원함으로써, 제21대국회가 '일하는국회'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1) 제15대국회 법률안 발의·제출 건수는 총 1천951건(의원발의 법률안 1천144건, 정부제출 법률안 807건)이고, 제20대국회는 총 2만 4천141건(의원발의 법률안 2만 3천47건, 정부제출 법률안 1천94건)임

2) 제15대국회는 4년간 총 899건의 법률안 입안의뢰가 접수되었고, 제20대국회는 총 4만 3천135건의 법률안 입안의뢰가 접수됨.

3) 상임위원회 의뢰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분석 업무는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이에 제18대국회 2천596건, 제19대국회 3천590건, 제20대국회 4천408건 등 지속적으로 행정입법 검토건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21대국회 1년간 15개 상임위원회에서 1천609건의 행정입법 검토를 의뢰받아 총 1천 278건을 검토하였음.

## “답은 늘 현장에 있어… 국민 주거안정에 최선 다할 것”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Q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여당 간사위원님께서 각 오와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국토위는 우리의 안식처인 주거와 국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전반을 소관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언제나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및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

고 늘 답은 국민과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Q 간사위원님께서 현재 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국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조속히 공급되어야 합

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이익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개발과정에서 투기세력 개입과 등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최저주거기준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가구 주거면적이 14㎡(4.2평)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활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조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Q 제21대국회 첫 1년간 국토위가 거둔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택배 노동자 등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 개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임대사업자의 횡포와 편법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아파트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을 근절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 배송 제한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법 통과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A. 우리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그릇된 인식하에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가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신종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를 신속히 재정비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Q 상대 간사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현승 간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탁월한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균형감각을 두루 갖춰 언제나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위원회에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책적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과 협치에도 강점을 갖고 있어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우리 상임위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현승 간사님과 함께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국토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 “상생과 협력으로 국민 가려운 곳 긁어주는 위원회 될 것”



이현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Q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야당 간사위원님께서 각오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A. 국토위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집값 안정과 같은 국토위의 모든 현안들이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쟁 없는 상생의 정치와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Q 간사위원님께서 현재 국토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올해 초에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사태와 세종시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문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정작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내부정보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건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민간부문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현실화를 명목으로 급등시키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역시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폭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Q 제21대국회 첫 1년간 국토위가 거둔 주요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리 국토위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린 LH사태가 논란이 되었을 당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재발을 막기 위해 열흘 만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교통소위에서 통과시켰고, 도시철도 교체 예산의 국비지원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국민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A. 무엇보다 서민들의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되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2년 사이 무려 3억 원이 올라 1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결국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 수요자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이제 와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상대 간사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조용천 간사님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진정한 협치를 만들고자 힘써주고 계십니다. 함께 상임위를 이끌어가는 입장으로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많은 현안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경산 '반곡지'에서

## 역사·문화의 향기 가득한 살기좋은 도시, 경산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경상북도 경산시

깨끗한 자연환경에 교육·문화, 농·산업이 잘 어우러진 도시 경산은 원호대사와 설총, 일연 스님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또 해마다 입시철이면 팔공산의 갯바위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경산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산업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윤두현 의원을 만나 그의 지역 자량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삼성현과 한장군의 발자취 살아있는 경산



윤두현 의원은 취재진을 가장 먼저 '삼성현역사문화공원(三聖賢歷史文化公園)'으로 안내했다.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삼성현의 정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탁 트인 조경, 레일썰매장, 국궁체험장, 돌레길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지역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삼성현(三聖賢)이란 원효대사, 설총 선생 그리고 일연선사를 일컫는다”고 설명하며 “2015년 4월 말 개관한 삼성현역사문화관에는 상설전시실(원효실 및 설총·일연실)과 기획전시실 등이 있는데, 특히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던 중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던 일화를 구성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이 인기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두현 의원은 경산 자인면에 있는 계정숲으로 이동했다. 계정숲에는 한장군의 묘와 사당, 자인단오제보존회 전수회관이 있는데 마침 이날은 단오를 맞아 ‘경산자인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가 열리고 있었다.

윤두현 의원은 “한장군은 9세기 전후 신라시대에 왜구들이 주민들을 괴롭히자 누이와 함께 꽃관을 쓰고 춤을 추면서 유인해 섬멸한 인물로 전해지는데, 한장군이 죽은 후 주민들은 사당을 세우고 단오절이면 추모 제사를 지낸 뒤 3~4일간 여원무와 무당굿, 씨름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경산자인단오제’가 여기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자인면의 제석사는 원효대사가 태어난 곳이란 이야기가 전해오고 용성면 반룡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찾은 윤두현 의원(왼쪽)과 '경산자인단오제' 모습

산 기슭의 반룡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아들 설총이 자란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귀신과 액운을 쫓는다는 삼살개(천연기념물 제368호)도 경산의 자랑이다. 삼살개는 대담하고 정이 많으며 충직한 동물로 이름이 높다.

### 아름다운 '반곡지'와 기도처 '갯바위'



“외침, 재해가 없고 흉수도 없어 예부터 기름진 땅으로 살기좋은 동네, 복받은 땅이었다”는 경산은 그래서 저수지와 수리시설이 발달했다. 비가 적어 사과, 복숭아, 대추 등 과일의 당도가 높고 농사가 잘돼 주민 소득도 높다고 한다. 윤 의원은 “경산은 다른 지방과 달리 해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느는 등 살기좋은 도시로 소문나고 있다”고 자랑했다.

남산면에 있는 '반곡지(외반지)'는 웨딩 촬영객과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촬영 명소다. 아름답리 버드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반곡지는 주변에 복숭아밭도 펼쳐져 있어 봄이면 화사한 복사꽃과 수면에 반영된 버드나무 풍광이 장관이라고 한다. 사진작가들은 2011년 이곳을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선정했다.

한편 경산 북쪽에 위치한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은 흔히 '갯바위 부처'로 알려져 있다. 갯바위 부처는 사찰 선본사의 문화재로, 해발 850m의 험준한 팔공산 관봉에 둘러쳐진 암벽을 배경으로 조성된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선덕여왕 때 의현대사가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갯바위 부처를 조성하는 동안 밤마다 큰 학이 날아와 지켜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정성껏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준다

는 영험 많은 부처로 알려져 연중 기도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특히 입시철에는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대구와 접해 있어 대구 쪽에서 많이 오르지만 갯바위는 경산 와촌면 대한리에 속해 있다. 경산쪽 팔공산 자락에는 선본사 외에도 유서깊은 사찰이 많다. 와촌면 강학리의 불굴사에는 원효대사가 수련한 석굴이 있다.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서 삼국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다 천신으로부터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다고도 한다.

### “경산, ICT 산업 도시로 만들 것”



제21대국회에 첫 등원한 윤두현 의원은 YTN 기자 출신으로 YTN 보도국장,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등을 지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 “경산의 인구는 28만 명으로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방 대학의 위기와 산업환경의 변화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ICT 기반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교통의 확충도 필수적이어서 대구 지하철 연결 문제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역발전의 성패가 ‘초연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먹거리산업을 선점, 육성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ICT융합’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산은 6개의 국책연구기관과 10여 개 대학, 4개의 산업단지 등 풍부한 산학연 인프라로 ‘ICT융합’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원책 마련과 문화관광 등 신성장 산업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

경북 경산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팔공산  
갯바위에서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7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박홍근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추경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함께 활동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밤샘회의가 잦았는데 항상 엄청난 양의 자료를 사전에 공부하고 오셨다”며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칭찬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제가 먼저 추천할 기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호 의원님을 1순위로 꼽았을 것”이라면서,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국회 본회의에서 본예산을 처리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추경호 의원님과 여야의 경계를 넘어 터놓고 소통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정치’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박홍근 의원은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대행 등을 역임한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 설립된 KYC(한국청년연합)의 공동대표를 거쳐 2030유권자네트워크 상임위원장,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연대의 후신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7년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됐다.

“저를 여의도 정치로 이끈 계기는 ‘정치의 위기’였습니다. 시대적 과제와 제도권 정치의 부조화가 심각해질 때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007년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도전했지만 당내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공천만 바라지 말고 원칙적으로 소신

있게 준비하지'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역 단체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 급식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중랑을 공천에 무려 8명이 도전장을 낸 민주통합당에서 후보로 선출돼 제19대국회에 입성했다.

**불평등, 불공정 해소위해 최선을 다할 것**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의정 부문 대상',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공로대상',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인터넷 검색창에 '국회의원 박홍근'을 검색하면 수상내역과 뛰어난 의정활동에 대한 뉴스가 끝없이 이어진다.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두 부문 수상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자, 박 의원은 "민생을 위해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민생정치를 펼치기 위해 '을 지키는 민생실천 위원장'을 맡아 '을'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2년 동안 방송스태프 근로조건 개선, 케이툰(KTOON) 작가 상생협약 등 크고 작은 38건의 민생과제를 해결했지요. 또 425일간 이어진 파인텍 노동자의 75미터 굴뚝 고공농성과 510일 동안 25미터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택시노동자의 농성 해결 등 장기간 방치된 갈등 의제를 잇달아 해결하면서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을 담은 '청년기본법'을 발의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필요하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현장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겪는 '을'이 없어질 때까지 현장을 누비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제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의원을 칭찬합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양산시갑)은 보수진영에서 손꼽을 수 있는 명확한 자기논리와 설득력을 지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상대 패널로 만난 적이 있는데, 현안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차분하면서 논리정연하게 펼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송이 아니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야 파트너로도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분입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역	지	사	지
(易)	(地)	(思)	(之)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결 못할  
문제 없어”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제천시의회원과 제천 시장을 각각 두 번씩 역임한 후 국회 입성에 성공한 엄태영 의원은 '4전 5기'의 정치인이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 낙선한 그는 2002년 제천시장으로 당선돼 8년을 보냈고 이후 2012년과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궐 선거까지 총 네 번의 도전 끝에 의원 배지를 달았다. “제천 시장 후 10년, 중앙정치 입문 20년 만에 다시 공직을 맡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엄태영 의원을 만나 그의 좌우명과 그간의 활동,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었다.

‘자동차 판매왕’으로 도쿄 모터쇼 참관

엄태영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易地思之(역지사지)’다.

“학창시절 주위 친구들이 제게 집안문제부터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을 털어놓으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잘 해주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역지사지를 실천하며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우자동차에 입사한 그는 제천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도쿄 모터쇼 참관 기회를 주는 판매왕 선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6개월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직원 30명을 뽑는다는 소식이었죠. 끈질긴 집념과 프로근성을 발휘해 판매왕이 됐고 일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지요.”

3박4일 동안 낮에는 모터쇼를 참관하고, 저녁에는 백화점 등 시내 곳곳을 둘러보면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은 그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주변에 30대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나라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33세의 나이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재선 후 민선3기 제천 시장에 당선된 엄태영 의원은 이후 8년 동안 한방특화산업도시, 영상문화관광도시, 평생학습교육도시라는 제천의 세 가지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렸다.

“흔히 사람들은 제천이라고 하면 시멘트 공장이 많은 동네,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이 통과하는 철도도시를 떠올립니다. 저는 제천의 이런 거친 회색빛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시장 취임 후 6년간의 준비 끝에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방특화산업도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2005년 시작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 17회째를 맞으며 영상문화관광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 우수인재 육성 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이 중 35억 원으로 고려대 인근에 ‘제천학사’를 건립했고, 지역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직접 고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화하라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의원으

로서, 시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에게 역지사지를 강조합니다.”

### “문화관광휴양건강도시 제천·단양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될 것”

20년 만에 입성한 국회에서 그는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제천·단양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단양만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문화관광휴양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조사 설계비, 제천~괴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중부권내륙고속도로 연구용역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단양경찰서 신축, 단양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예산 확보를 비롯해 단양 도시재생뉴딜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 선정 등 단양의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중심의 문화관광휴양건강도시로서 제천·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엄태영 의원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 미래세대 위해 경제질서 제대로 세우고파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정)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카카오뱅크가 첫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을 무렵 그의 제21대 총선 출마 소식은 업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또 정치권에 입문하며 그는 카카오뱅크 대표로서 받을 수 있던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금융 전문가 이용우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빈익빈 부익부' 해결 위해 경제학과 선택

이용우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 부사관이었다.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주변에서 서울대 법대 진학을 권유받았지만 반항심으로 경제학과를 선택했다고 했다.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지도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를 아버지로 둔 친구 집에 놀러가서 경제학 책들을 재미있게 읽기도 했어요.

대입 면접관이 조순 전 총리셨는데 저에게 ‘왜 경제학에 오려고 하나’ 물으시더군요. 제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정작 대학시절 전공 공부보다는 이념 서클활동에 치중한 그는 대학 3,4학년 때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당시 공부를 하려면 해외 유학을 많이 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는 ‘국내경제 문제를 공부하려면 국내에서 공부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같은 부류였다. 학교 동기들과 한국경제와 자동차산업에 관한 책을 펴내기도 한 그는 당시의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의 문제를 짚으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오일쇼크와 더불어 발생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 마찰 당시, 기업 간의 단순한 통상 문제가 국제교역, 국제통상 문제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경제 시스템, 정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실제 법안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요.”

1991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친구 장하준 교수의 아버지였던 장재식 전 의원(전 산업자원부 장관) 밑에서 보좌관 생활을 1년여 하기도 한 그는 미국의 청문회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정책 수립에 있어 의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현대그룹 종합기획실과 동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일하다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를 거쳐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정치계 입문 당시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우리 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라고 말했다”며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문제를 고치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 ‘청년기본자산법’과 ‘가상자산법’ 발의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최근 출생한 시점부터 매달 20만 원을 적립해 18세가 되면 6천만 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의 주된 내용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 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천만 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용도에만 한정 지급 등이다. 이 의원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의 화폐 여부 논란보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거래소가 시세조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방안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그는 “늘어나는 인구수만큼 교통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일산호수공원 인근의 한류월드 조성계획을 하나둘씩 진행하고, 기존의 테크노밸리를 바이오메디컬밸리로 조성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결정’(決定)의 ‘결’은 ‘제방 뚫을 결로 제방의 어떤 곳을 뚫어야 최소한의 피해를 볼 것인가’라는 뜻인데, 이는 바로 어떤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잘 경청한 뒤에 잘 결정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글 김영선 사진 김진원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년이 지난 가운데 관련한 실태 점검과 추가 법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정부가 인력수급을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력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

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사 인력, 그마저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과목에 치우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전공을 중심으로 지역 의사제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책임병원 설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회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없이도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면서 “다만 법이 생긴 것이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인력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후 종합계획이 왜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조율이 중요하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승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초 실시한 ‘모성정원제’에 대해 소개했다. ‘모성정원제’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병원 간호업종 등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상시 정규직 정원으로 배치 운영하는 제도다.

보훈병원에서는 2019년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모성정원제를 도입해 지난해 231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100%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간호직의 육아휴직이 18%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모성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의 질은 보건의료 노동자

들의 건강한 노동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은 출산을 위한 모성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로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환자에 집중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힐 수 있는 의료현장, 노동권과 모성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토론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범위 설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이나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근무하는 시설기와 같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청소까지 확대될 경우 감시적 근로자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외 청소 등 업무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이는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연구위원은 “아파트 현장이 아무리 대동소이하더라도 단지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업무의 종류와 업무량이 다르고 경비원이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가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입주민의 의무 또는 생활문화 개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경비원 업무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경비업법과 관리현장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토부는 현재까지 경비업무 외 택배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청소 등 4대 업무와 함께 관리사무소 행정업무 보조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관계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면서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으며 큰 방향은 경비원 본연의 경비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관리사무소 행정업무 보조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경비원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에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임금이 인상해 결국 관리비에 예민한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노사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게 되고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 방침을 현장에 명확히 고지하고 교대근무 개편을 홍보하는 등 행정을 집중해야 하며, 총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천준호 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는 경비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토론회에서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6월 7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이양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이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 이양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이 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유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 농업에 기여했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방에 이양될 경우 산업은 물론 축산농가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유기질비료사업 자체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

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있다”며 “정책적인 지원 의지가 지원자금 규모 축소를 통해 판단 가능한 지금, 당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적어도 유지,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정책과 관련해 지방 이양 시 발생될 문제점으로 지역 예산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관련 기관 간 상호 관리 혼란, 원료 다발생 지역 처분 어려움 등을 꼽았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으로 이양되면 사업의 주체가 없어진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식량안보를 확보해주는 사업인 만큼 지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주관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축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유기질비료업체들이 축분을 처리하기 힘들고, 농업인들도 유기질비료를 쓰기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의 품질관리로 퇴비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비를 통해 지원물량을 더 늘리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

안호영·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8일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환경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영세중소기업 고유 업종인 재활용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전국 400만 영세 재활용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대기업은 이미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거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재활용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폐플라스틱과 페트가 주요 진출분야다.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재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질을 만들어 ESG경영 전환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재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환 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을 넘어 아예 밥상째 통째로 가지겠다는 방식으로 침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은 “대기업들이 ESG경영을 앞세워 재활용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조금의 수익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소규모 재활용업체의 영역이 아닌 재활용의 고도화된 기술의 연구개발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조남준 전국고물상연합회장은 “재활용 산업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단계에서는 대기업의 재활용업 진출 형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자본 및 기술 투자를 유도해 폐기물처리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상생 및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특히 ESG경영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이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하거나 대기업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ESG 열풍 속에서 기존 재활용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큰 틀을 담당했던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

국회 섬발전연구회(더불어민주당 서삼석·김원이·김승남·김태년·백혜련·송재호·이인영·주철현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이달곤 의원)는 6월 15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섬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독극성, 부식성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면 생태환경은 물론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국제 관행에 어긋난 오염수 처리 방식, 혼란을 부추기는 일본의 불확실한 해류 예측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

했다. 대응방안으로는 부지 내 보관용기를 늘려 인근 대규모 저수지 축조, 전국 어민 해상 시위 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등을 제안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내도 여전히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 희석해도 변하지 않은 오염물 총량 등에 대한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제공을 지적했다. 이어 안 국장은 국제사회 공조와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으로 국제사회와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 국내 원전 및 방사능오염 안전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해수 전국채낚기 울릉어업인 총연합회장, 박형욱 보성군 장도 주민대표,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서태주 신안군청 천일염지원과장, 서일환 전북대 농업생명공학과 교수 등 토론자들은 섬 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국내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가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오염수 배출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 수립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는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안 심사, 예산안·결산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사하는 안건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국회의원은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국민의 불신은 국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의원의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국회의원은 일반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기준 적용받게 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규정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셀프 특혜’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독립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위원회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의 위원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는 등 국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의원이 일반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유의하여 조문작업을 했으며, 결국 의원은 일반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의원 당선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이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위원회를 배정하며, 안전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등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둘째,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전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

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국회법’에 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모든 행위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므로 일반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제21대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적용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5월 30일 시행된다. 즉, 제21대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의원 각각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위원회의 안전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 발생을 촘촘히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일반공직자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 자성적 노력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독일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권력분립과 합의정치 구현



주성훈  
국회 독일주재관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정부와 의회는 권력을 공유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집중에 대해 16개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이 입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과 주(Länder) 간 권한배분을 통해 수직적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주 역시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수평적(실질적)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은 연방상원으로 이송되고, 연방상원이 이견을 제기해 양원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양원에서 동등하게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소집되어 중재절차를 통해 합의정치를 구현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위한 연방상원 참여, 중재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의정치 구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실질적 권력분립을 위한 연방상원 참여

연방상원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하기 전 사전 검토(제1독회)한 후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연방하원에서 이송된 법률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연방상원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제2독회)한 후 최종적으로 법률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 연방하원의 일부(교섭단체나 재적의원 5% 이상), 연방상원은 법률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각 주에서 제안한 법률안 초안을 재적 과반수로 의결하고, 연방하원에 법률안을 제출한다.<sup>1)</sup> 독



독일 연방 상하원 합동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회의 모습

일에서 공포되는 법률안의 80%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것이고,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법률안에 대해 사전 검토할 수 있다(제1독회).<sup>2)</sup>

둘째, 제출된 법률안은 연방하원에서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심의·의결된다.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을 소개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 심사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며, 본회의 3독회 후 최종 표결한다.

셋째, 연방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은 연방하원 의장

에 의해 지체 없이 연방상원으로 이송된다. 연방상원은 이송된 법률에 대해 심의(제2독회)한 후 법률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상원이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sup>3)</sup>에 대해 동의하거나 이의법률(Einspruchsgesetz)<sup>4)</sup>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법률로 성립된다. 연방상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위원회를 소집한다.

넷째, 연방대통령은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송된 법률에서 명하고, 동 법률을 연방법률 공보에 공포할 것을 연방

1) 연방상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은 먼저 연방정부에 송부해 연방정부가 심의한 후 6주(예외적으로 3주(긴급) 또는 9주(기한 연장 요구)) 이내 연방정부 의견을 명시한 반론서(Auffassung)와 함께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제출한다(기본법 제76조제3항).

2) 연방정부는 주무부처 초안을 연방내각에서 의결한 후 동 법률안을 연방상원에 송부해야 하고, 연방상원은 법률안을 검토한 후 6주(예외적으로 3주(긴급) 또는 9주(기한 연장 요구)) 이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의견을 수리하면 지체 없이 연방하원에 제출해야 한다(기본법 제76조제2항).

3) 동의법률 3가지 유형: ①기본법을 변경하는 법률(연방하원 및 연방상원 2/3 다수결) ②주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③법률의 실행을 위해 주 행정관청의 설치 및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독일에서 통과된 법률 중 동의법률 비율은 제19대 의회 38%, 제18대 의회 36%, 제17대 의회 38%임.

4) 동의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이의법률에 해당.

법무부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은 확정된다.

###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합의정치 구현

연방상원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률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률유형(동의법률 또는 이의법률)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동의법률은 연방정부, 연방하원, 연방상원 모두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연방상원이 끝내 동의를 거부하면 법률로 성립될 수 없고 폐기된다. 이에 반해 이의법률은 연방상원만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연방하원은 2종의 특별다수결로 연방상원 이의를 기각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다.<sup>5)</sup>

중재위원회는 연방하원 16인, 연방상원 16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된다.<sup>6)</sup> 중재위원회는 다수결로 표결하고, 원활한 합의와 조정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 간 신뢰를 중요시해 각 주 및 교섭단체는 한 의회기 동안 최대 4번까지만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수정할 권한은 없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할 권한만 보유한다.

현실적으로 중재위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양원 집권세력에 따라 중재위원회 소집 빈도

가 달라진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집권세력이 달랐던 1972~1980년, 1991~1998년, 2002~2005년에는 중재위원회가 다른 의회기보다 빈번하게 소집됐다.<sup>7)</sup> 최근에는 독일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 및 사회민주당(SPD)이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 중재위원회 소집 횟수는 제18대 3건, 제19대 6건으로 축소됐다.

최근 중재위원회 중재사례를 살펴보면, 통신법의 사용자 정보제공 절차가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연방하원은 법률을 개정했고, 해당 법률이 연방상원 과반수를 통과하지 못해 부결되자 연방정부는 중재위원회를 소집했으며, 중재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정보제공은 형사범죄에만 적용하고, 행정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sup>8)</sup>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상원이 심의한 후 이견을 제기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실질적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고, 하원과 상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정치를 구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

5) 동의법률의 경우 중재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안하면 연방하원은 법률을 재의결해야 하고, 재의결된 법률에 대해서도 연방상원이 동의를 거부하면 그 법률은 폐기된다. 이에 반해 이의법률의 경우 중재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연방하원은 법률을 재의결해야 하고, 재의결된 법률에 대해 연방상원은 ①동의 ②재적과반수 이의제기 ③재적2/3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연방하원은 재적과반수 이의제기에 대해 연방하원 재적 과반수로, 재적2/3 이의제기에 대해 연방하원 출석 2/3 및 재적 과반수(2종의 특별 다수)로 연방상원의 이의를 기각할 수 있다.

6) 연방상원은 16개 주를 대표해 각 주 대표 16인으로 구성되고, 연방하원은 교섭단체 비율로 16인의 위원을 배분한다. 중재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상원 소속 위원은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파견된 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7) 1972~1980년: 하원 SPD, 상원 CDU/ 1991~1998년: 하원 CDU, 상원 SPD/ 2002~2005년: 하원 SPD, 상원 CDU

8) 제19대 의회의 경우 공포된 법률안 394건 중 연방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83건(21%)이고, 이 중 집권여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회민주당 외에 야당이 참가한 법률안은 3건에 불과하다.

## 국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현안보고 등 실시

### 국방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6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비판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이날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질의에 돌입한 여야 위원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낱알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인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 장관에게 진상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외양간이라도 튼튼히 고치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위원(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뒷기에 급급하다. 이렇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위원(국민의힘)은 “사건이 생기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묻고, 은폐하고, 피해자를 괴롭혀서라도 상관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신원식 위원(국민의힘)이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추후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법제사법위, 공군 부서관 사망사건 관련 현안질의 및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6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서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공군에서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것이냐, 혹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공군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수진 위원(국민의힘)도 “군은 체계가 생명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군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군의 미흡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 근거 규정만 있고 인권보호관이 없다. 인권 교육을 받은 적 없죠?”라고 묻자, 서욱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욱 장관은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소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날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3월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탄원서에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이 탄원서의 내용은 전날 확인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국민의힘)은 “탄원서 내용만 보면 뭐 하느냐, 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피해자 측의 탄원서가 군 검찰에 도착한 시점도 쟁점이 됐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이라며 해당 탄원서를 국선변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군 검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무시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선변호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4월 20일경 군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군사법원 제도의 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고, 송기현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 법안들은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용근 부소장은 현재의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 법원의 구성 원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천영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이를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항소심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하여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 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교수는 전시전환의 급작성, 법원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군사기밀 누설 우려·사건관계자 출석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 민간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와 관련, 군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군사법원 존폐 논의 시 군 지휘권보장 뿐만이 아니라 군 인권보장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군사법원법 개정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주요국가들의 군사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밝혔다.

### 보건복지위, '문턱 없는' 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6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웠다. 또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회의장 출입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는 본회의에만 제공돼 상임위원회 회의는 청각장애인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국회사무처에 요청해 사용자에게 따라 높이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 문턱을 모두 제거하는 한편, 전체회의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상임위원회 최초로 시행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장애물 없는 국회 조성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를 이용하고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장애물 없는 평등하고 편안한 국회'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 문제 해결 강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6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위원들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행위에 대해 IOC에서 공감할 만한 국제적 스포츠외교 공조 등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등 문제와 관련,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종환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관련해 IOC 방문 조속 추진, IOC 전체 위원에게 서한 발송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육일기 문양 체육복, 응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IOC위원장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방안을 묻는 김의겸 위원(열린민

주당)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6월 11일 집행위원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잠정 결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브리즈번의 단독 개최는 7월 21일 IOC 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황 장관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유치가 본래 취지였고, IOC가 (남북 정상 합의) 의미를 크게 받아 들였는데, 그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 장관은 2024년 탁구 세계선수권,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획재정부, '상위 2%' 중부세 논의

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의 6월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상위 2% 중부세' 방안이 쟁점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중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여당 입장이 조세법률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장혜영 위원(정의당)의 지적에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와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부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부분 중부세 관련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2%에게만 중부세를 부과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 지를 미리 알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경준 위원(국민의힘)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비판했다. 류성걸 위원(국민의힘) 역시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일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 중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취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리 박민선

#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한 힘이므로 지역적 편차가 있고 장기간 저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 수소는 지역적 편차가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생산 이후 장기간 저장 및 대규모 운송이 가능하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소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월 9일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을 의결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수소법’은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배준형 과장은 “수소경제 육성 의지가 법률에 반영돼 동법 제정이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실제 많은 기업이 CO<sub>2</sub>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용·활용 등 전주기에 2030년까지 총 4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이행의 가속화를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 및 의무사용 방안, 산업분야의 수소사용 확대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사항이 반영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소법’은 또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수소법’이 제정된 후 반년 뒤인 7월 1일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 장관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수소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11개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신에너지산업과 배준형 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제 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1천 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수소전문기업에는 수소분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을 통해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각각 지정했다.

이들 전담기관은 각각 전문 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 조성, 수소 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 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소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글 박민선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21-04-29  
본회의 의결 2021-05-21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 NEWS

## 박병석 국회의장, 베트남 국회의장과 화상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23일 브영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베트남에게 한국은 1위 투자국, 2대 공적 개발원조(ODA) 지원국이자 3대 교역국”이라며 “약 8천 개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베트남 입국 승인이 지연되고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 기업·금융인에게 특별입국제도를 재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해 베트남 방문 당시 베트남 지도자들에게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베트남 지도자들도 동의한 만큼 후에 의장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후에 의장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월 베트남 방문 때 베트남 지도자들이 한국에 요청했던 큰 사안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60% 증가하고, 올 초부터 소수의 인원이지만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후에 의장은 “의장님의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베트남과 한

국 외교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후에 의장은 “베트남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측에 백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면서 베트남 코로나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 국회·대전광역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는 6월 17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대전광역시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회의사무처와 대전광역시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번에 건립되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 센터로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실현하고 국회 내 산재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해 디지털 국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지면적 3만 2천㎡(9천680평)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총 5개 층 규모로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체험·전시관, 시민의정연수시설 등을 포함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 국회, 한 달간 '클린디쉬 캠페인'



국회가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로 환경보호에 나섰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을 진행했다.

'클린디쉬 캠페인'이란, 국회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잔반 없이 식사하면 식판 하나당 5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국회 내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국회본관1식당에는 잔반량을 확인하는 스캔기기 2대와 참여인원·펀딩누적금액·절감된 음식물 쓰레기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황모니터가 설치됐다.

'친환경 국회 클린디쉬' 행사에 참석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환경보호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작은 행동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국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 실천에 나서는 클린디쉬 캠페인이 환경보호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주길 기대한다"며, 국회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독려했다.

###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완비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는 6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해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해 전기차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데 4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100kW급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절반가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 NEWS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적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3대 주요업무지구이자 교통 요충지인 여의도 국회 내에 2019년 설치된 수소충전소와 2021년 확대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에 더해 20여 대로 증설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친환경 모빌리티인 수소차, 전기차, 자전거를 이용해서 국회에 더 쉽게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거점이 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이 국민통합에 대해 의견 제시하는 ‘국회국민통합위 홈페이지’ 오픈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에 온라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국회는 국회개원 73주년을 맞아 6월 4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었다. (<https://nas.na.go.kr/integration>,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홈페이지에서는 국회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현재 정치·경제·사회 3개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민통합 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자유발언대’도 운영해 국민통합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임재정·김형오 두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까지 전체 회의 5회, 각 분과위원회는 각각 7회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국회 회의 중계, 세계 최초로 실시간 AI 자막시스템 구축



국회는 6월 21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국회 구현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회사무처-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간 업무협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AI 음성인식기술 기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과 국회 의정활동 및 국회 내부 구성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구현, 국회 입법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국회의 디지털 혁신 및 지능형 국회 구현과 ETRI의 지능정보 핵심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ETR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AI 음성인식기술 기반 상임위원회 실시간 자막시스템'을 올해 2개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시범구축하고, 내년에는 AI 학습체계를 구축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AI 음성인식기술 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가 국회의 모든 회의 중계 영상에 적용되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그간 회의 중계 자막은 주요 회의에 대해서만 속기를 통해 제공되거나, 생중계 이후 속기록을 바탕으로 사후 제공돼 청각장애인 등 국민들이 생생한 의정활동 현장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최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정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국회 정보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국회 구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도서관,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상시 수집·상영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8일부터 '지역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의 문화·예술 공간인 아트월에서



국회의원실 등으로부터 수집·제공받은 지역문화 콘텐츠 영상을 상영했다.

이번에 소개된 영상은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이 제공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자연을 담은 것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과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해법을 구하기 위한 취지로 상영됐다.

국회도서관은 보다 많은 지역의 동영상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17개 광역시·도 등 전국 의 지역 영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상영할 예정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국회도서관 아트월 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문화·예술·자연을 소개해 국회도서관이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도서관,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은 6월 15일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 NEWS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EU(유럽 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했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해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는 2015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회용품(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나무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 제품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에 집중해 통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EU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에산정책처,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발간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안정화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주요국 경제에서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

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일관된 재정운용을 위한 목표치 설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재정지표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요인을 제외한 기저적인 재정지표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정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적용하는 추정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수준과 재정여력을 가능하게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를 고려한 3변수 비관측인자 모형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00년대 초반 5%를 하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8%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실질GDP갭(실질GDP-잠재GDP)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만을 고려한 2변수 모형보다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경기전환국면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했다. 중기적 재정기조를 가능할 수 있는 경기조정 재정수지의 평균은 전통적인 2단계 접근법과 동시적 추정법에서 모두 세계금융



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조정 재정수지의 변동으로 재량적 재정정책의 대응성 및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한계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보다 일반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총량적 재정수지만을 분석한 본 모형을 주요 재정수입과 지출항목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경기변동에 따른 주요 항목별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를 동시에 추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실업을 변수나 소득분배 지표 등을 추가해 고용 상황 변동이나 소득분배의 변화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32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산업의 기술수준 비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산업의 기술수준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NABO Focus 32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친환경 기술수준과 해당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주요국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 친환경 산업의 기술수준을 검토한 결과,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의 시장점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탄소중립 기술은 이미 시장확대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부문



은 최고기술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96.0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34.7%로 높았다. 친환경차의 기술수준도 90.0으로 상위권이며 그에 따라 친환경차 점유율도 6.9%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2014년 이후 정체된 반면,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4년 68.8에서 2020년 82.5로 빠르게 성장해 우리나라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5개국 중 최하위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과 수송체계, 산업공정 등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요구하며, 기술수준은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친환경 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술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지난 6월 1일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

# NEWS

에서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 차에 접어든 제21대국회가 국민통합의 옹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만홍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주제인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의 발제자인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개헌논의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어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의 중심이 ‘권력에서 국회로, 다시 국민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하고, 국민의사로서 숙성한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합의기구와 국민합의절차에 대한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이라는 제2주제의 발제자인 연세대 전광석 교수는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헌법의 위기라 진단하고, 최후의 대응 수단인 헌법개정이라 밝혔다.

제3주제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으로, 발제자인 서울대 송석윤 교수는 정치질서 관련 헌정제도 개편은 제도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운영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형태의 변화는 민주성과 통치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3일 세종시에서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만홍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 이강섭 법제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제1세션 발표와 토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제2세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제1세션은 한정미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와 권채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철호 법제관(법제처)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2세션은 김주경 기획법무담당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 발표(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전문정 입

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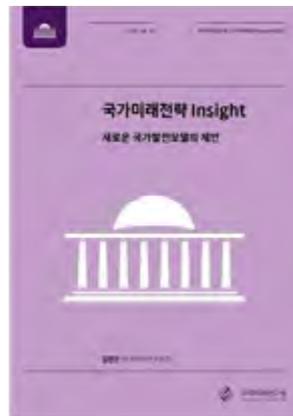
### 국회미래연구원, 국민주도의 국가발전모델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0호(표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를 6월 10일 발간했다.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시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일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 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 국회미래연구원·'의회정치의 미래',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 직원 연구모임 '의회정치의 미래'와 공동으로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지난 6월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 사업에 참여한 국회 보좌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로 국회 내부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의회정치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뤘다.

제1차 '미래지향적 국회만들기'에서는 홍기돈 보좌관(서동용 의원실)과 김보미 비서(이은주 의원실)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김명신 선임비서관(김상희 부의장실), 조병수 보좌관(유의동 의원실)이 참가했다. 제2차 '입법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홍지웅 보좌관(김상훈 의원실)과 손낙구 보좌관(김정호 의원실)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박성진 보좌관(홍영표 의원실)과 이승환 보좌관(이은주 의원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마지막 '국회의 갈등과 미래'에서는 박선민 보좌관(이은주 의원실)과 정동규 보좌관(박영순 의원실)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기일 비서관(김태년 의원실)과 주영민 비서관(홍정민 의원실)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 나은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에서 사서(司書)로 근무하기



**이유림** 서기관  
국회도서관 정치행정정보과

**Q** 언제부터 국회에서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국회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1990년 6월 국회도서관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에서 제 전공이 문헌정보학이라 서류를 쫓아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자료실에 입사하고 싶었는데, 시대감각이 조금 앞섰던 저희 어머니가 국회도서관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이고,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을 계속하는데 제약이 없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한 자 한 자 수기로 카

드 목록을 작성했었는데, 그 대신 컴퓨터에 서지사항을 입력하면 도트프린터가 카드목록을 쪽쪽 출력해주는 완전 획기적인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컴퓨터 입력 속도가 빠르고 프린터 리본을 잘 교체해서 선배님들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Q** 국회도서관 소개와 함께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A** 저는 국회도서관을 조용하지만 다이나믹하고, 엄전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전시 중에 부산에서 장서 3천여 권과 사서 1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약 720만 권의 장서와 30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2022년에는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우선적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실 및 국회입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의회 및 법률 정보를 검색해 제공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팩트북-한눈에 보기 시리즈’ 등 입법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다른 일반 도

서관과 차별화되는 국회도서관 사서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업무이고, 해외자료조사관과 법률자료조사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25만 건의 자료를 수집해서 DDC 분류번호와 저자기호를 부여해 정리하고, 열람실에 배열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서관 사서들이 하고 있는 전통적인 일입니다.

또한, 국회전자도서관 등 여러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0만 건(약 3억만 면)의 자료를 원문 구축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나 IoT,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위해 원문데이터의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근무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1996년 정보검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이용자들이 찾고 싶은 주제나 자료들을 직접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검색을 해서 관련자료 리스트를 출력해 주던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용자들이 긴 줄로 서서 기다리면 정말 설 틈 없이 검색을 해주면서 힘들었는데, 하루는 신입 후배가 “선배님, 선배님은 저희랑 얘기할 때는 잘 웃는데 왜 열람자분들한테는 웃지를 않으세요?” 하고 묻기에 “6개월만 지나봐”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잘 웃던 세계에서 웃음을 찾아간 힘든 일이었지만, 이용자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 저를 버티게 했고 보람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기록보존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국회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제정하기 위해 위원회와 각 처리과를 방문해 직원분들과 면담을 하고 서류철을 일일이 다 뒤적이며 국회사무처의 업무를 분석하느라 고군분투했는데요, 지금도 그 분류기준표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먼지 뒤집어쓰면서 일했던 고생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Q 현재 담당업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는 국회도서관 사서만이 하는 특별한 업무, 즉 회답과 팩트북 발간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의회정보실의 총괄적인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의회정보서비스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기가 힘들어 약60여 개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보좌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 방안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외부인들의 국회도서관 이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개관하게 될까요?**

**A** 현재 외부 도서관들은 개관을 하고 있는데 비해,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일원으로 방역에 더욱 조심해야 하기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관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편복사와 상호대차, 전자책과 무료 웹DB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재개관을 앞두고 도서관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어 조만간 일반 이용자에게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시간들을 돌아켜보니, 국회도서관 시소र्स(관련 용어 사전)를 구축하고, 인터넷자료를 확충해 공공정책정보DB로 발전시키고, ‘현안입법알리기’라는 발간물을 만드는 등 새로운 업무를 함께할 때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도서관이 개최하고 있는 ‘AI와 국회포럼’을 보면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함께 해 보고 싶고,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그 역할을 다 해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유키

## 고구려의 동맹이었던 중앙유라시아 초원의 강국, 유연(柔然)제국



중앙아시아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민족들 가운데 유연(柔然)제국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초원 유목국가다. 흉노제국이 멸망한 이후 돌궐제국이 등장하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에서 다양한 정치 집단 사이 쟁투가 거듭되었는데, 이를 평정한 것이 바로 유연제국이었다. 기원후 5세기 초부터 6세기 중반까지 몽골초원과 중앙아시아를 제패한 유연제국은 무엇보다 고구려의 동맹으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번 7월호에서는 유연제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흉노제국의 분열 이후 유라시아 초원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북흉노의 잔존세력이 선비족에 의해 멸망됐고, 남흉노가 위치해 있던 고비사막 이남에는 오환(烏桓)이라는 집단이 강성했다. 중국 지방에서도 후한(後漢) 말의 혼란을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했던 진(晉)나라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침입을 받아 남중국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 틈을 타 다수의 흉노, 선비 집단이 북중국으로 유입됐고, 새롭게 부상한 유연이 초원지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연제국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자료는 극히 적다. 비문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남긴 돌궐이나 위구르 제국과 달리 유연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연이라는 명칭은 탁발선비족이 북중국에 세운 북위(北魏)에서는 연연(蠕蠕), 오호십육국의 전란을 피해 남중국으로 피신한 동진(東晉)

등 남조(南朝)에서는 예예(芮芮), 이후 중국을 재통일한 수(隋)나라에서는 여여(茹茹)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됐다. 중국 측 역사자료에 남겨진 흔적을 보면 유연인들은 몽골계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연 제국의 군주들의 성씨는 ‘옥구려(郁久闐)’로 중국의 역사서 ‘북사(北史)’의 기록에는 목골려(木骨闐)라는 이름의 선조에서 그 성씨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목골려가 몽골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 ‘법치’ 기반으로 150년이나 왕조 유지한 유연제국

유연제국은 탁발선비족의 북위와 갈등 관계를 이루었다. 영화 ‘물란’의 주인공인 화목란(花木蘭)이 북위 출신이었고, 그녀가 싸웠던 초원의 유목 국가가 유연이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흉노에 대



유연제국 지도



당나라 시기 제작된 '왕희도에' 묘사된 유연 사진

해 한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문화에 친숙해진 북위는 유연을 야만인 집단으로 편취했다. '북사(北史)'에 따르면 북위(北魏)의 태무제(太武帝)는 유목 생활을 영위하던 유연인들을 '무지'하다고 비하하면서, 벌레들

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뜻하는 연연(蠕蠕)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 또한 유연의 선조 목골려가 북위 군주의 선조 탁발역미(拓跋力微)의 노예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북위 자체가 탁발선비족이 세운 국가이지만, 유목민이었던 유연을 비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연이 북위 군주의 골치를 썩게 했던 듯하다.

북위 측에서 '아만스러운 유목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것과 달리 유연제국은 사실 상당한 제국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유연의 군주는 탁발선비족의 북위 군주들처럼 가한(可汗), 즉 '카간'이라는 칭호를 취했다. 중국의 역사서 '위서(魏書)'에 따르면 '구두벌가한(丘豆伐可汗)'이라는 칭호를 취한 유연의 군주 사륜(社崙)이 고비 사막 북쪽 몽골초원으로 쳐 들어가 고차(高車)로 알려진 부족 집단을 제압한 이후 맨 처음으로 한 일은 '군법(軍法)'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후 유연 카간 가운데 '법제를 밝혔다(彰制)'는 뜻의 두라벌발두벌가한(豆羅伏跋豆伐可汗)이 통치한 것으로 보아 유연제국의 '법치'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치'를 기반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유연제국은 150년이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78년간 지속된 1차 돌궐제국(2차 돌궐제국은 59년간 지속)이나 96년간 지속된 위구르제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다.

유연제국은 '법치'를 바탕으로 몽골초원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도 진출했다. 당시 몽골초원 서쪽에는 흉노의 잔여 세력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먼저 유연을 치고자 했으나 오히려 격퇴당하고 결국 유연에 복속하게 된다. 중국 측 기록에는 유연이 언

기(焉耆) 즉 지금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북부의 우룸치(Urumqi) 근방까지 진출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연제국은 훨씬 더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 현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일대까지 장악했다. 유연제국은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은 월지(月氏)-쿠산제국을 수차례 공격했고, 쿠산제국은 이를 피해 아무다리야 이남 발흐(Balkh)로 수도를 옮겨야 했다. 쿠산제국이 박트리아(Bactria)에서 재차 이주해 북인도 지역으로 진출한 것도 이러한 유연제국의 압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소그드인들 다수 등용해 제국 경영에 활용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 인근까지 확장한 유연제국은 당시 국제상인 네트워크로 명성을 얻었던 소그드(Sogd)인들을 다수 등용해 제국 경영에 활용했다. 실제 다수의 소그드인들이 유연 제국 내에서 상인과 관리로 활동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999년 중국 태원(타이위엔, 太原)에서 출토된 소그드인 우홍(虞弘)의 비문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출신이었던 그는 유연 카간의 명령에 따라 월지(月氏), 토욕혼(土谷渾) 및 페르시아에 사신으로 파견되고, 이후 북중국에 정착하게 됐다. 이러한 소그드인들의 네트워크는 유연제국을 거쳐 돌궐제국, 위구르제국 시기에도 계속 유지됐다.

유연제국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고구려의 굳건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이다. '위서(魏書)'에 따르면,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에 맞서기 위해 유연제국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백제

개로왕(재위 455~475년)이 북위 효문제(孝文帝)에 보낸 서신에는 고구려 장수왕(재위 412/413~491년)과 유연제국 사이 동맹을 '입술과 치아'를 뜻한 '순치(脣齒)' 관계였다고 묘사할 정도로 고구려-유연 사이 유대관계는 돈독했다. 이러한 동맹관계를 통해 고구려는 유연과 함께 요서지방 북쪽에 위치한 거란(契丹)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거란 북쪽에 위치한 지두우(地豆于) 부족 집단을 정복해 그 영토를 양국이 나누는 등 팽창정책을 적극 추구했다. 비록 유연제국은 552년 알타이 지역에서 부상한 돌궐제국에 의해 멸망하지만, 유연과 고구려의 동맹 관계는 돌궐제국 초기에도 계승되었다. 이렇게 초원 유목 제국과의 친밀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세력을 떨칠 수 있었다.

유연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유목국가를 대표한다. 자신들의 역사를 남기지 않아 잊힌, 특히 중국 측 기록에는 '벌레' 같은 존재로 폄하된 유연제국은 사실은 '법치국가'로서 150년이 넘게 유라시아 초원을 호령한 강국이었다. 또한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통해 고구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돌궐제국이 멸망하고 유목민들이 당나라의 군대로 편입된 이후에는 고구려의 서북 변경 방어선이 급속히 무너진 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유연제국은 우리 민족과 중앙아시아 민족의 우호 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 좋은 실례라고 하겠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심형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세계절전시온실 전경



지중해온실



열대온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국립세종수목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심형 수목원이자 세 번째 국립수목원이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수목유전 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 축구장 90개 규모인 65ha 크기의 국립세종수목원에는 20여 개의 주제전시원에 2천957종 204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해 3가지 추천코스를 마련했다.

추천코스1은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해 사계절전시온실과 한국전통정원, 분재원, 어린이정원, 생활정원을 돌아보는 코스로 1시간이 소요된다. 중간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까지 들르는 추천코스2는 2시간, 수목원 전체를 돌아보는 추천코스3은 3시간 정도 걸린다.

### 국립세종수목원의 상징 사계절전시온실 등 20여 개 주제전시원 조성

국립세종수목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계절전시온실은 붓꽃의 3수성(꽃잎)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으로, 지중해온실, 열대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되어 있다. 32m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 지중해온실에는 물병나무, 올리브, 대추야자, 부겐빌레아 등 228종 1천960본의 식물이 조성되어 있다. 열대온실은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무고사리, 알스토니아, 보리수나무 등 437종 6천724본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전통정원은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궁궐정원은 창덕궁 주합루와 부용정을 실제 크기로 조성했고, 별서정원은 소쇄원을 주제로 계류, 화오(화단), 담장 등을 연출했다. 민가정원은 옛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정자목과 돌담 등을 도입해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전통정원 전경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

분재원은 화분에 담긴 자연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분재를 감상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형태의 분재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4계절 동안 분재 관람이 가능한 상설전시관, 분재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관, 진경산수를 축소해 연출한 석가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정원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기구, 측백나무로 만들어진 미로정원, 전래동화 속 식물로 조성한 민속놀이정원, 숲속 놀이터인 숲모험원, 실생활에서 물의 활용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정원은 방문객들이 먹거리나 볼거리로 활용되는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채소 씨앗을 뿌려 어린 식물을 생산하는 온실, 블루베리정원, 유실수정원, 산나물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있다. 이 밖에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원, 다양한 양서류와 수생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양서류관찰원, 문화행사가 열리는 잔디광장인 축제마당 등도 살펴볼 수 있다.

#### 인공수로로 연결된 물길 따라 운치 있는 풍경 연출

세종수목원은 저수지인 함양지와 실개천, 습지원이 인공수로로 연결되어 있어 물길을 따라 걸으면서 계절마다 특유의 운치를 즐길 수 있다. ‘물을 가진다’는 의미의 함양지는 금강에서 물을 유입해 수목원을 가로지르는 실개천으로 공급해준다. 함양지에서 출발한 물길은 전통정원과 분재원을 거쳐 민속식물원까지 돌아 흐르면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한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때문에 세종수목원 동시 관람객 입장은 5천 명으로 제한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사계절전시온실은 회당 300명만 입장할 수 있어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www.sjna.or.kr](http://www.sjna.or.kr))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습지원

### 보행약자 위한 전기버스 탑승 관람 서비스도 제공

도보 관람이 불편한 방문객은 전기버스를 타고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다. 전기버스 역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장애인, 만 70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 1인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운영일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목요일을 제외한 화, 수, 금요일 10:00~15:30(동절기), 16:30(하절기)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정류장에서 티켓 발급 후 탑승이 가능하다.

세종수목원은 개인 및 단체 방문객들을 위해 해설사와 함께 코스를 돌아보는 해설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개관은 매주 화~일요일이며 운영 시간은 하절기(3~10월) 09:00~18:00(입장마감 17:00), 동절기(11~2월) 09:00~17:00(입장마감 16:00)이다. 🍷

세종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친 '황열병'



불과 2세기 전까지 북미 대륙, 오늘날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과 아이티 같은 카리브해의 섬들 중 일부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토록 광활한 북미 영토를 전혀 뜻밖의 요소로 인해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황열병(Yellow Fever)' 때문이었다.

황열병은 원래 서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 황열병을 옮기는 것은 아프리카의 열대숲모기인데, 황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황열병 증상은 바이러스가 간에 침범해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며 고열과 두통 증세와 함께 팔과 다리가 고통스럽고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며 몸이 쇠약해진다. 대략 짧으면 5일에서 10일 이내에 대부분의 감염자가 사망한다.

그런데 황열병은 16세기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된다. 유럽의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 쳐들어와 현지 원주민인 흑인들을 붙잡아 배에 태워서 그들이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황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들도 함께 배에 실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고, 마침 무덥고 습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모기들이 아메리카의 습지대에 정착해 번성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황열병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은 오랫동안 황열병에 시달리며 항체와 면역력을 갖춰 황

열병에 걸려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백인들은 황열병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황열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백인들은 황열병에 걸리기만 하면 거의 다 숨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791년 8월 22일의 아이티 독립 전쟁이었다.

북미 대륙 동쪽에 위치한 카리브해의 섬인 아이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프랑스인들은 이 아이티에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었고, 농장에서 값싸게 일할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다. 그렇게 흑인들이 재배한 사탕수수는 공장에서 설탕으로 가공되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고, 그 수익은 프랑스 정부가 1년에 거두는 세금의 25%나 되었다.

#### 아이티 흑인 노예들이 독립전쟁 일으켜

그러던 와중인 1789년, 프랑스에서 왕정에 반대하며 모든 인간의 자유를 외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아이티에서 고통받고 있던 흑인 노예들도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자유를 외치며, 1791년 8월 22일 독립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흑인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1802년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그 무렵 프랑스 군대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는 나폴레옹의 지휘를 받았으며, 전투력도 세계 최강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던 만큼 아이티의 보잘 것없는 흑인 독립군은 순식간에 진압할 수 있을 것

으로 여겼다.

하지만 막상 아이티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아이티섬에 황열병이 창궐하던 와중이었는데, 섬에 상륙한 프랑스 군인들이 황열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프랑스는 현재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을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루이지애나를 지키던 프랑스 군대 중 대부분이 아이티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아이티로 갔다가 황열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광활한 루이지애나를 지킬 병력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지키는 일과 아이티 독립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프랑스 정부는 결국 1803년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1천50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다. 아울러 더 이상 아이티에 군대를 보내 흑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여겨 물러났다. 그리하여 1804년 아이티는 독립을 쟁취했는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들 중에서는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다.

모기가 옮기는 황열병이 프랑스 군대를 괴멸시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드넓은 북미 식민지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순식간에 영토를 2배나 넓혀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아이티의 흑인들은 고대하던 자유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 🍷

글 도현신 작가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품어주는 손장섭의 역사적 풍경



손장섭 '남해바다' 캔버스에 아크릴, 112x162cm

손장섭(1941~2021)의 그림에는 그만의 독특한 흔적이 나타난다. 그의 붓질은 거침없이 경쾌하다. 이른바 '손장섭색'이라고 말하는 그 독특한 색도 색이지만, 그만의 칼칼한 맛이 살아 있는 '손장섭붓질'은 어떤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덧붙여지고 흠어지는 날개가 아니다. 그의 붓질은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선으로 존재한다. 작품 '남해바다'는 손장섭의 전형적인 화풍이 잘 나타나는 100호 크기(112×162cm)의 아크릴화다. 아크릴화는 유화에 비해 담백한 맛이 있다. 수성 물감인 탓에 작품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붓의 속도감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면은 다섯 개의 수평선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제일 앞에 있는 나무 구조물과 그 뒤로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와 바다양식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이 그것이다. 목재와 바다와 양식장 부표와 산과 하늘의 구름 등 이 그림에 등장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같이 색과 선이 각자의 움직임으로 살아 있다. 하늘의 구름에는 꿈틀거리는 격정의 드라마가, 바다의 일렁임에는 잔잔한 서정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전남 완도가 고향인 그에게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와 섬, 양식장의 풍경은 그것에서 삶을 꾸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서사를 대변하는 풍경, 즉 민중의 역사적 풍경이 담겨있다.

6월 초 82세의 일기로 작고 전까지 손장섭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전업 화가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1979년에 리얼리즘 계열의 창작동인인 '현실과 발언' 창립동인으로 참가했다. 이후 1986년에는 민족미술협의회 초대 대표를 맡으며 험난한 시대의 행동하는 예술가로 앞장섰다.

그는 4·19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회화 작품으로 남겼다. '사월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1960년의 4·19를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서라벌예술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시위 현장에 나간 손장섭은 덕수궁 대한문 인근의 골목에서 뛰쳐나오는 학생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수채화로 그렸다.

#### 풍경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해온 거장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그린 그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고등학생 시절의 손장섭이 그린 이 그림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장차 1980년대를 풍미했던 민중미술 운동의 선봉에 선 화가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다. 특이한 것은 수채화인데도 흰색 물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수채화는 물을 사용해 농담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흰색 물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붓질하지 않은 흰 종이 색을 드러내서 하얀색을 표현하곤 한다. 그런데 손장섭은 수채화를 그릴 때부터 하얀 물감을 사용했다. 이 습관은 이후 평생에 걸친 그림들에서 이어져 흰색을 섞어 청회색이나 은회색을 만드는 '손장섭색'을 완성했다.

손장섭은 역사의식을 담은 풍경화를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분단의 아픔을 그린 기지촌 풍경이나 철망으로 가로막힌 휴전선의 풍경 등이 그것이다. 그는 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서 청장년기를 보낸 장본인으로서 역사로서의 유월항쟁을 그리기도 했다. 그는 역사를 가늠하게 해주는 ‘물질적 흔적으로서의 회화’에 천착했다. 자연풍경을 통해 역사를 펼쳐 보여주는 그의 회화는 언필칭 ‘정치적 풍경’의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다. 2019년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손장섭 개인전의 제목은 ‘손장섭-역사가 된 풍경’이다. 평생을 풍경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해온 거장에 대한 헌사다.

#### ‘손장섭붓질’의 묘미 보여주는 나무 그림들

그는 또한 나무를 통해 민중의 삶을 표현했다. 뿌리와 줄기와 가지, 이파리 모두 나무를 이루는 요소들인데, 하나의 생명체로서 나무가 지닌 생명력과 역사성에 주목한 그는 전국의 기운 좋은 나무들을 찾아내서 그림으로 남겼다. 그의 나무 그림들은 역사를 목격한 민중의 대리자로서의 나무에 주목한 것인데, 이 또한 생명력의 물질적 흔적으로서의 회화이다. 그의 나무 그림들은 역사적 풍경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나무를 주제로 했을 때 거거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들을 통해 그는 ‘손장섭색’을 넘어서 ‘손장섭붓질’의 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의 역사적 풍경 그림들은 존재하는 그대로의 자

연을 대상화해 회화로 재현한 것이 아니다. 손장섭은 회화적 표현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하나의 드라마로 재구성한다. 2차원의 평면 위에 펼쳐지는 드라마는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되는 공간예술이다. 드라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과 상황이 바뀌는 시간 예술인데, 2차원 평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회화에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회화 속의 드라마를 구성하는 핵심은 구도와 색채와 선 등 다양한 요소들에서 나온다. 회화의 드라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골고루 곳곳에 담아낸 손장섭의 회화는 그래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손장섭색/붓질’이 남긴 회화적 성취를 한국미술사는 길이 기억할 것이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유윤기



국회 본관 전면 2층 계단에 걸려 있는 손장섭의 '남해바다'



## 여름을 맞이하는 ‘꼬리풀’

국회 본관 앞 은은한 보라색 꽃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야생화 ‘꼬리풀’입니다. 동물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6월에 개화해 키가 40~80cm까지 자라는 모습을 8월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 불교문화유산의 정수, 환상의 콤비...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경남 합천 해인사에 가면,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있다. 현재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팔만대장경은 오래된 목조 건물(해인사 장경판전, 藏經板殿)에 보관 중이다. 거창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한 건물인데, 이것은 국보 제52호다. 팔만

대장경과 이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모두 국보라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장경판전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장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기록한 불교 경전을 총망라



팔만대장경 경판

한 것이다. 해인사의 대장경은 경판의 수가 8만 1천258장이고 8만 4천 번뇌에 해당하는 8만4천 범문을 실었다고 해서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뿌리는 11세기 초조(初雕)대장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조는 처음 새겼다는 뜻이다. 거란이 이 땅을 침입했던 1011년 고려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장경 판각을 시작했고 1087년에 완성했다. 그것이 초조대장경이다. 송과 거란 등의 대장경을 종합해 만든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방대한 대장경이었다. 그런데 초조대장경 목판은 1232년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고 그것을 찍은 판본만이 일부 전한다. 초조대장경 목판이 모두 불에 타버리자 고려인들은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이것이 재조(再雕)대장경이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불력(佛力)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절절한 기원이 경판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팔만대장경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런데 해인사에 가면 경판뿐만 아니라 그걸 보관하고 있는 목조 건물

장경판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벌써 500년 넘게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지은 목조 건축물이다. 이 건물을 처음 지은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세조 때인 1457년 크게 다시 지었고 1488년 성종 때에 왕실의 후원으로 또다시 지었다는 내용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후 수차례의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경판전은 남북으로 배치된 두 채의 긴 건물(정면 15칸, 측면 2칸)과 그 사이의 작은 건물(정면 2칸, 측면 1칸)로 이뤄져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4채의 건물이 길쭉한 네모 모양의 공간을 구성한다. 긴 건물 가운데 남쪽(앞)의 건물은 수다라장(修多羅藏), 북쪽(뒤)의 긴 건물은 법보전(法寶殿)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그저 단순한 건물인데, 별다른 시설도 없이 500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수다라장과 법보전 건물벽 위아래의 불박이살 환기창을 주목한다. 잘 들여다보면, 위 아래 창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수다라장 앞쪽 벽 남향창은 아래창의 크기가 위 창의 4배이고 뒤쪽 벽의 북향창은 위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장 현판

창 크기가 아래창의 1.5배 정도다. 법보전도 각각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율은 비슷하다. 왜 이런 것일까.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가 아래 위로 돌아 나가도록 하고, 공기 유입량과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또한 건물을 서남향으로 배치해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했으며 건물 내부 바닥엔 숯, 횃가루, 소금 등을 뿌려 습도를 조절하고 해충을 막아냈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장경판전 건물 내부의 통풍과 습도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기에 그 오랜 세월 팔만대장경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은 그야말로 환상의 콤플렉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두고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 제작 시기와 제작 장소에 관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16년 동안의 작업 끝에 1251년 제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 동안 판각했다는 견해도 있다.

제작 장소 논란이 특히 흥미롭다. 그동안 학계에선 ①인천 강화 제작설 ②경남 남해 제작설 ③강화와 남해 공동

제작설이 제기되어왔다. 일반적으로는 강화에서 팔만대장경을 판각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제작 직후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板堂)에 보관해오다 강화도 선원사를 거쳐 조선 태조 때인 1398년 서울에 있는 지천사(支天寺)로 옮긴 뒤 그해 다시 합천 해인사로 옮겼다는 견해다.

### 약 300톤인 팔만대장경, 어떻게 옮겼을까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론은 우선 '엄청난 양의 팔만대장경을 강화에서 합천 해인사까지 여러 차례 옮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판 8만1천 258장의 무게는 대략 280톤. 실제로 경판을 옮기려면 경판과 경판 사이에 완충용 종이도 넣어 포장을 해야 한다. 완충지와 포장 재질의 무게까지 합하면 그 무게는 훨씬 더 늘어나 400톤 가까이 육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10톤 트럭 40대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강화 제작설보다는 남해 제작설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경판의 목재 재질을 분석해보니 남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후박나무, 거제수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남해 제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화도에서 만든 뒤 합천 해인사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남해 등 남부 지방에서 만들어 가까운 해인사로 옮겨 놓은 것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미스터리임에는 틀림없다. 이 미스터리에는 팔만대장경의 신비감을 더해주고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의 위상을 더욱 높여준다.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해인사가 올해 6월 19일부터 매주 주말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소식이다. 매회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지만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을 직접 관람하고 그 천년의 분위기를 느껴본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대한민국 의정 종합채널 NATV가 만듭니다



정치 특특

talk

# 사이이다

특 쏘는 사이다처럼 명쾌하고 속 시원한 본/격/정/치/시/사/토/크!  
매주 금요일 밤 10:00

前 국회의원  
김재원



前 국회의원  
김형주



진행 시사평론가  
이승원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정지용문학관 앞에 정지용 동상이 보인다. 사진 왼쪽에는 정지용 생가가 있다.

## 시인의 마을

### 정지용 문학기행

1988년 월북 및 남북 문인들의 해금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정지용 시인은 우리 곁에 다가왔다. 노래로 만들어진 그의 시 '향수'는 이른바 '국민시'가 되었고 정지용 또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남북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잠자야 했던 정지용, 그가 살았던 흔적을 돌아본다.

내가 인제  
 나뭇 같이  
 죽겠기로  
 나뭇 같이  
 날라 왔다  
 감정 비단  
 네 옷 가에  
 앉았다가  
 窓(창) 흰 하니  
 날라 간다

정지용 시인이 남긴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나비’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마치 그의 앞날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는 이 작품을 남긴 그해 9월에 숨졌다. 그의 죽음에 대해 소문만 무성했고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당대 최고의 시인을 잃은 것은 분명하다. 당시 그는 채 50세도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시인의 죽음은 그가 태어난 고향 마을로 발길을 인도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시인의 고향으로 가는 길,

정지용의 시를 읽는 옥천의 아침은 싱그러웠다. 관성회관 주변에 있는 그의 시비들을 찾아보며 아침을 보냈다. 발걸음은 옥천 구읍으로 향했다. 옥천읍 문정리 죽향초등학교 교정 한쪽에 정지용 시비가 있다.

정지용은 옥천공립보통학교(현재 죽향초)에 다녔다. 동시 ‘해바라기씨’가 새겨진 시비를 보고 학교를 나선다. 학교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 어린 지용의 발걸음을 상상하며 그가 걸었던 길을 걷는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인이 태어난 생가가 있다. 사립문으로 들어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어린 지용의 뒷모습을 그려보며 정지용문학관으로 먼저 발길을 돌렸다.

문학관에서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연대별로 정리한 전시 글을 읽으며 그의 일생을 한 눈에 넣는다. 1902년에 실개천이 흐르는 옥천에서 태어났고,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학업과 시 창작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일본 유학 생활을 거치며 1926년 스물다섯 살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1929년 귀국 후 시문학과 구인회 동인으로 활동했고 1939년 ‘문장’지 창간과 함께



정지용문학관 내부



정지용문학관 야외에 놓인 조형물



정지용 생가. 정지용이 살았던 때와 흡사하게 재현했다.

시 부문 심사위원이 되어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김중환, 이한직, 박남수 등 기라성 같은 문인을 등단시켰다는 기록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정지용 시인의 아름다운 시어와 그 해설을 볼 수 있는 장치 앞에 섰다. 화면에 시가 올라가고 해당 시어 위에 물방울 모양이 얹혀졌다. 그 물방울 모양을 누르면 화면 한쪽에 시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시어를 손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장치도 있다. 해당 장치 앞에 서서 공중에 비치는 빛에 손바닥을 모으면 글자가 손바닥에 모여 아롱거리다 흘러 사라진다. 정지용 시인의 시어들을 두 손 모아 받아두는 시간은 짧았지만 시어를 고르고 다듬기 위해 인고했던 시인의 시간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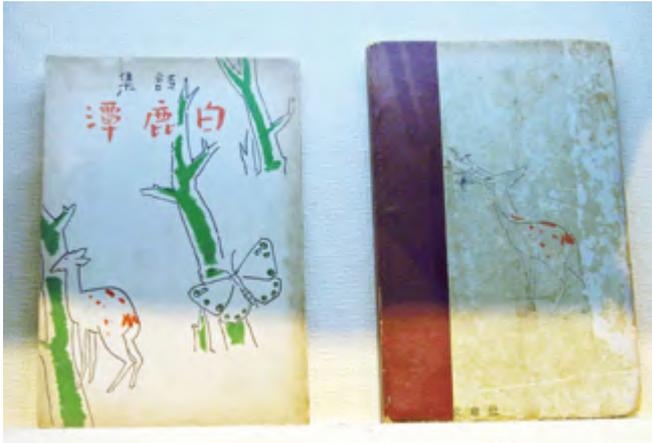
###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초가에서 들었던 시인의 이야기

노래로 만들어져 이른바 ‘국민시’가 된 시 ‘향수’ 같은 풍경이 그의 고향에 있다. 그가 태어난 생가 앞에도 실개천이 흐르지만 시 속의 그 장면은 아니다. 생가에서 동

쪽으로 3~4km 정도 가면 대청호로 흘러드는 금강 물줄기가 나온다. 그 물가에 수북리, 석탄리 등 마을이 있다. 정지용은 고향에 머무를 때면 수북리 금강, 집 뒤 일자산 등으로 산책을 다녔다. 시인의 발자국을 따라 가본 시인의 고향 풍경에서 그의 시를 보았다.

오래전에 정지용 문학제에 참석한 정지용 시인의 큰 아들들 시인의 생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북리며 일자산 이야기도 그에게서 들은 얘기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시를 쓰는 아버지’, ‘아주 엄격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추억 속 정지용 시인은 항상 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필기도구가 없으면 머리 속으로 시를 구상하고 시를 썼다. 당신의 시는 물론 국내외의 많은 시를 외고 있었다.

정지용의 아버지는 약재상을 했었다. 원래는 현재 생가에서 좀 떨어진 수북리에 살았었는데, 당시 옥천에서 사람의 왕래가 많았던 지금 생가 자리(옥천읍 하계리)로



1941년 문장사에서 발간한 정지용 시집 '백록담' 초판. 정지용문학관에 전시됐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정지용 시인의 조형물

집을 옮겼다. 당시 집은 본채 두 칸에 사랑채가 따로 있었다. 우물도 당시부터 있었다.

정지용은 1902년 음력 5월 15일 이 집에서 태어났다. 생가는 1974년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집이 들어섰다. 정지용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의 고증을 통해 1996년에 옛 모습과 흡사하게 생가를 복원했다. 생가 앞에는 그의 시 '향수를 새긴 시비가 있다.'

### 마지막 거처

오래 전에 만났던 정지용 시인의 큰아들은 이사한 서울 집 주소를 서대문구 북아현동 1-64로 기억하고 있었다. 당대의 문인들이 드나들었던 정지용 시인의 북아현동 집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정지용 시인이 서울을 떠나 3년 동안 살던 곳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이다. 정지용문학관 자료에 따르면 1944년 서울 소개령으로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로 이사했고 1946년에 서울 돈암동으로 다시 이사했다.

정지용 시인이 살던 소사본동 집터에 세워진 상가건물 벽에 1993년 복사골문화회가 만든 안내판이 붙어 있다.

안내판에는 '여기는 한국 현대시의 큰 별인 정지용 선생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약 3년 동안 은거하면서 詩心(시심)을 키우던 곳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 앞 도로 가에는 정지용 시인이 들마루에 앉아 있는 조형물이 있다.

정지용 시인은 1946년에 서울 돈암동으로 이사를 한 뒤 1948년에 녹번동에 생의 마지막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다. 녹번동 초당 터를 알리는 안내판에 1948년에 정지용은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이곳에 'ㄱ'자 6칸 초가를 짓고 1950년 납북되기 전까지 작품 활동에 몰두했다는 내용과 1950년 1월 새한민보에 게재됐던 '녹번리'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정지용 시인은 이 집에서 살다가 한국전쟁을 맞는다. 그리고 그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정지용문학관 자료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7월에 젊은 문인 4~5명이 찾아와서 함께 나간 게 마지막이었다. 납북되어 평양의 어느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인민군과 함께 북쪽으로 가다가 미군 폭격기의 공격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등 시인의 죽음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 공문서에서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세요

‘전문용어’는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뜻하는 말이다. 흔히 학술용어라고도 하는데,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일상용어와 다르다. 따라서 공문서에는 가급적이면 일상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문용어는 학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용어는 유사한 대상이나 현상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일상용어보다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 한자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문서에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의도치 않게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말뜻을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된 ‘국어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다.

- (1)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열화되면서 채색층의 박리(剝離)·박락(剝落)과 표면 오염도 관찰되는 상태이다. (문화재청, 2020. 6. 18.) →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한 재료의 성능이 약화되면서 칠한 부분이 벗겨지고 떨어지는가 하면 표면도 오염된 상태이다.
- (2) 월성2호기 등 노형별 대표 원전 8기를 선정하여 1단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7. 10.) → 월성 2호기 등 원자로 형태별 대표 원전 8기를 선정하여 1단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의 예문에서 ‘열화되다, 박리, 박락, 노형’ 등은 문화재와 원자력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전문용어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순화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열화되다’처럼 순화어가 없는 말이라도 널리 쓰지 않는 말은 ‘약화되다’처럼 널리 쓰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가뭄저항성 품종개발은 물론 내병성 품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2021. 6. 3.) → ‘가뭄저항성이 높은 품종과 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 (4)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6. 3.) →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문(3)에 사용된 ‘내병성’이라는 전문용어의 순화어는 ‘병견딜성’이다. 그런데 이 말은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므로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에 강한’이라는 풀이말을 ‘내병성’ 앞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예문(4)에 사용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순화어가 없는 전문용어인데, 이런 경우에도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는 풀이말을 앞에 두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한결 쉽다.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 6월 임시국회 시작,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등

### 6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 6월 4일

- 6월 임시국회 시작

### 6월 8일

- 더불어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받은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 조치 등을 권유하기로

### 6월 9일

- 여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 집중 비판

### 6월 11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 6월 12일

-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수석대변인에 황보승희 의원, 비서실장에 서범수 의원 내정

### 6월 14일

-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 6월 16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층 위해 특임장관 신설하겠다” 밝혀

### 6월 17일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하겠다”고 밝혀

-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결정

### 6월 19일

- 더불어민주당, 쿠팡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 “더 이상 희생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 6월 21일

-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 6월 22일

- 김부겸 국무총리, 초과 세수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대체공휴일 확대법 의결… 광복절부터 적용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양이원 영 의원 제명

### 6월 23일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내년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

### 6월 24일

-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복당

### 6월 25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 밝혀
- 더불어민주당, 예정대로 9월초 대선후보 선출하기로

### 6월 28일

- 박병석 국회의장, 윤희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

정리 윤성혜



## 빛이 빛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2021. 7. 1. - 7. 29.

### 국회 ART GALLERY 7월 작품전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Blue dance, 공감〉 등 회화 17점
- 작가 윤정미, 도해심
- 추천 한무경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2063

### <편집후기>

어느새 꽃내음 가득했던 봄이 훌쩍 지나가고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여름날 농부의 헌신과 땀방울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땀 흘려 볼까 합니다.

-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7월 국회보는 제21대국회 1년을 돌아보는 행사와 기획으로 꾸몄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알찬 성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 김현아

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0여 년만의 지각장마라고 합니다. 이달 초 제주에서부터 장마철에 접어든다는데, 몸과 마음이 이 축축해지기 쉬운 요즘 하루하루 뽕송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고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세계최초라 하니 자랑할 만합니다. 이 법이 우리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귀중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박민선

짹하다 요란한 소나기가 반복되는 요즘의 변덕스런 날씨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를 직접 겪어보니 친 환경 생활을 서둘러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성혜



TV로도 즐기고  
폰으로도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국회방송 NATV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

IPTV  
**olleh tv**  
65

IPTV  
**SK Broadband B tv**  
65

IPTV  
**U tv**  
172

**skylife**  
165

**케이블 방송**  
지역에 따라 채널 번호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사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국회방송 앱



●소셜미디어 채널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